

독일의 ODA 현황

I. ODA 관련법 제정 여부

□ 독일의 경우, 아직 대외원조(ODA)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임. 이와 관련, 독일도 대외원조사업의 정책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‘대외개발지원정책법 제정’이나 ‘대외개발지원정책 각료회의 설치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대책은 없음.

-1994년 사민당(SPD) 의원들이 ‘대외개발지원정책법’ 제정을 발의하여 연방하원 경제협력개발위원회에서 1998년까지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며 현재도 일부에서 ‘대외개발지원정책법’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.

□ 현 사민당-녹색당 정부는 대외원조업무를 주관하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.

-타 연방부처에서 담당해 온 대외원조 관련 업무

를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로 이관

-국가안보회의(Bundessicherheitsrat)에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참석

-2000년 연방부처공동업무지침(GGO) 개정을 통해 타 부처의 입법추진에 대한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검토권 부여

II. 대외원조 시행기관 관련

□ 독일은 유상 및 무상원조로 나누어 시행기관을 구분하지는 않으며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가 전체 ODA의 약 63%(2003년 기준)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분야별로 각 연방부처가 부분적으로 대외원조를 시행하며 주정부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〈독일의 2003년 ODA〉

(단위: 1000유로)

재 원	양자	다자	전체	비중(%)
연방경제협력개발부	2,370,196	1,392,379	3,762,575	62.66
외무부	259,096	39,112	298,208	4.97
연방하원	60	0	60	0.00
연방보건복지부	0	27,665	27,665	0.46
연방소비자보호농업부	100	23,162	23,262	0.39
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	2,595	12	2,608	0.04
연방경제노동부	0	11,772	11,772	0.20
연방교육연구부	9,737	985	10,722	0.18
연방내무부	1,539	6,709	8,248	0.14
연방교통부	0	158	158	0.00
연방재무부	74	0	74	0.00
EU기여금 중 ODA 환산	0	905,410	905,410	15.08
주정부	606,788	0	606,788	12.11
연방자산(부채경감)	1,122,100	0	1,122,100	18.69
기타	209,882	0	209,882	3.50
상환액	-988,859	-8,901	-997,760	-16.62
순ODA지출 총계	3,593,319	2,411,357	6,004,676	100.00

※ 자료: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

〈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2004년 예산〉

(단위: 100만 유로)

양자					다자					
정부				NGO	기타	UN 국제기구	IMF 세계은행	세계지역 은행	EEF	국제환경
재정	기술	식량	인력							
982.5	594.9	71.5	287.8	463.6	32.5	1,289.0	155.2	163.8	468.7	138.0

※ 자료: 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

□ 독일의 무상원조 시행기관

-독일의 재정원조는 주로 재건은행(KfW), 기술 원조는 주로 기술협력공사(GTZ), 인력원조는 독일개발서비스(DED)와 InWent가 주로 담당 하며 기타 전문분야에 따라 연방지구과학 및 천 연자원연구소(BGR), 연방물리기술청(PTB), 독일학술교류처(DAAD), 훔볼트재단(AvH), 독일 연구재단(DFG)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

□ 독일의 부처간 위원회

-대외원조사업에 다수 부처가 관련될 경우, 관계 부처간 위원회(IMA:Interministerieller Ausschuss)가 구성되어 조정작업
-대외원조의 기획과 실행, 평가를 위해 1961년 기존의 외무부 및 연방경제부 담당 업무를 통합해 설립된 연방경제협력부(1993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로 개칭)는 1964년 기술원조, 1972년 재정 원조, 1998년 유럽연합 차원의 개발원조 등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원조 관련 쌍무협정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교역 및 체제 전환국 지원 관련 문제는 연방경제노동부(BMWA), 세계은행이나 IMF와 관련된 사항은 연방재무부(BMF), 환경 관련 지원은 연방환경부(BMU)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정 전문분

Ⅲ. 기타 관련 사항

□ 독일의 유상·무상원조 비율

- 독일에는 유상·무상원조에 대한 집계자료가 없음.
- 독일은 대외원조를 크게 형태상 ODA/OA, 양자/다자, 정부/비정부조직 등으로 구분하며 내용적으로는 재정원조, 기술원조, 인력원조 등으로 구분
- 재정원조는 대부분 장기저리차관 등 유상원조(LDC국가에 대해서는 무상)이며 기술 및 인력 원조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
-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2004년 예산총액 약 37.83억 유로 가운데 재정원조액은 약 9.83억 유로

아에 대해서는 타 부처가 주도

□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지원체제

- 독일은 2004년 5월 1일 연방국민보호 및 재난 구호청(BBK:Bundesamt fur Bevo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)을 신설하여 방재 및 구호·지원책을 총괄토록 하였으며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외무부 및 재외공관, 국경수비대 및 연방군 등과 협력하여 신속지원체제를 구축
-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사법(Konsulargesetz), 연방국경수비대법(Bundesgrenzschutzgesetz) 등에서 규정

[자료:주독일 대사관]